
자 료 집

국회ESG포럼 ESG 공시 제도화 방안 토론회

「자본시장법 개정안 방향」

- 일시 | 2025. 9. 30.(화) 14:00 – 17:00
-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주최 | 국회ESG포럼 (대표의원: 민병덕·정희용)
- 주관 | 국회ESG포럼 운영사무국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국회ESG포럼

프로그램

ESG 공시 제도화 방안 토론회: 자본시장법 개정안 방향

사회: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총장

시 간		프로그램
14:00 – 14:03	3'	국민의례
14:03 – 14:13	10'	개회사 민병덕 국회ESG포럼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희용 국회ESG포럼 공동대표 (국민의힘 의원)
14:13 – 14:20	7'	환영사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14:20 – 14:30	10'	축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의원)
14:30 – 14:35	5'	단체 사진 촬영
14:35 – 15:00	25'	[기조연설] 글로벌 투자자 관점에서 본 ESG 공시 법제화의 중요성 내이션 파비안(Nathan Fabian) PRI 지속가능시스템 최고책임자
15:00 – 15:15	15'	[발제 1] 글로벌 ESG 동향과 대응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
15:15 – 15:35	20'	[발제 2] ESG 공시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민경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15:35 – 16:15	40'	[패널토론]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좌장)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원장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과장 이용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 김원웅 국민연금 ESG 전략 팀장 최용환 NH-Amundi 자산운용 ESG리서치 팀장
16:15 – 16:55	40'	Q&A 세션
16:55 – 17:00	5'	마무리

| 목 차

I 인사말

개회사 민병덕 대표의원	5
개회사 정희용 대표의원	8
환영사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	10
환영사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13
축사 이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16
축사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	18

II 발제

[기조연설] 글로벌 투자자 관점에서 본 ESG 공시 법제화의 중요성	20
[발제 1] 글로벌 ESG 동향과 대응	23
[발제 2] ESG 공시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33

III 토론

좌장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패널1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원장	43
패널2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과장	49
패널3 이용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50
패널4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	53
패널5 김원웅 국민연금 ESG 전략 팀장	60
패널6 최용환 NH-Amundi 자산운용 ESG리서치 팀장	61



인사말



| 개 회 사

민 병 덕

국회ESG포럼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ESG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오늘 <ESG 공시 제도화 방안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해 주신 정희용 국회의원님과 국회ESG포럼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공동 준비해 주신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님과 이동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조연설과 발표, 토론을 맡아주신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께도 각별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기후위기와 국제 통상 질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ESG 공시는 단순한 자율 보고를 넘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뒷받침하는 필수 제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ESG 공시를 제도화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공통 언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EU의 지속가능금융공시(SFDR), 일본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SSBJ)의 공시기준, 미국 주(州) 단위 기후 동맹 등은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우리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회를 확보기 위해서는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ESG 공시 체계와 법적 기반 마련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국회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는 ESG 공시 기준과 로드맵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한 ESG 공시 법제화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 경제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정희용 회장님과 함께 국회 ESG포럼을 중심으로 법안을 성안해서 여야가 합심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산업계와 금융권, 시민사회, 정부와 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미래를 설계하는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뒷받침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제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국회ESG포럼도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30일

국회의원 민병덕

| 개 회 사

정 희 용

국회ESG포럼 대표의원(국민의힘)



안녕하십니까,

경북 고령군 · 성주군 ·칠곡군이 지역구인 국회ESG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희용 국회의원입니다.

「ESG 공시 제도화 방안 토론회」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포럼의 공동대표로 함께 하고 계시는 민병덕 의원님과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사무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내이선 파비안 PRI 지속가능시스템 최고 책임자님, 발제를 맡아주신 김태한 한국사회 책임투자포럼 이사님, 이민경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님, 좌장을 맡아주신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님과 패널리스트로 함께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전 세계는 이미 지속 가능한 성장과 ESG 경영을 기업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ESG 공시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경영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ESG 공시 제도화에 대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다만, ESG 공시 의무화는 시행과 동시에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와 단계적 접근이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도적 기준 확립을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회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논의와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논의되는 내용들은 우리나라 ESG 공시 제도화 방안 모색에 있어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께서 나눠주신 고전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챙겨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5년 9월 30일

국회의원 정희용

| 환영사

김 영 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투명성’(transparency)은 모든 정책의 기본입니다. 이 투명성만 제대로 확보해도 상당히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바로 ‘정보공개(Disclosure)’이며, ‘의무화’는 공개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그리고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이 정보공개 의무화가 십수 년 동안 지연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ESG 영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ESG 공시 법제화 노력은 제18대 국회의원 2010년 7월 박선숙 의원이 최초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시작하여 15년 9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ESG 정보공개를 반대하는 논리는 초기에는 시기 상조, 기업 부담, 자발적 공개였습니다. 지금은 ‘의무화 되어야 한다’는 방향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적용 시기와 적용 대상, 그리고 보고 채널 등과 관련하여 ‘준비 부족’과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특수성’ 즉 ‘제조업 비중이 높은 수출 중심 산업 구조라는 특수성’을 거론하며 ESG 정보공개 법제화를 지연시키는 방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ESG 정보공개 법제화는 ‘논의’만 무성하고 ‘결단’은 없는 동어반복이 지속되는 형국입니다. 주요국들이 ESG 공시 의무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사이, 우리나라는 다람쥐 쳇바퀴만 돌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ESG를 위한 자원 배분을 못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토록 답답한 상황에 이르게 한 책임의 상당 부분은 그동안 좌고우면(左顧右盼)한 금융당국에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금융당국의 태도는 새로운 정부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속가능성 규제를 간소화 하는, 유럽연합의 포괄적인 입법 개정안인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Package)와 미국 트럼프 2.0 정부의 거센 반ESG 기류를 거론하며, 우리도 이러한 동향에 따라 ESG 관련 법제화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기업 협회의 의견에 기대고 있다는 의구심을 품게 합니다. 유럽연합의 옴니버스 패키지는 구체적으로는 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CSDDD(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EU Taxonomy(분류체계),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주요 지속가능성 규제의 적용 범위와 요건을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특히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지침인 CSRD의 경우, 적용 기업 수는 당초보다 80% 감소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유럽연합과 우리나라를 단순 비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유럽연합의 ESG 법·제도·정책 인프라, 그리고 기업들의 대응 수준은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00M 달리기로 비유하자면, 유럽연합은 80M쯤 도달하여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겨우 30M 정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욱 속도를 내야 할 이유입니다.

지금은 여러 측면에서 대전환기입니다. 이 전환기의 방향에 대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속도를 내야 할 때입니다. ESG의 룰 세터(rule setter)는 되지 못했지만, 기후경제 시대, 지속가능한 경제 시대에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이 생존하려면,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는 되어야 합니다. 이는 전환기 시대에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ESG 공시의 적용 대상은 자산규모 2조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적용 시기는 2027년(FY26)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시채널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하되,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면책조항(safe harbor)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투자자의 요구에도 부합합니다.

오늘 국회ESG포럼이 주최하는, 구체적인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한 ‘ESG 공시 제도화 방안 토론회’는 더 이상 동어반복 ‘논의’가 아닌 ‘결단’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의지와 결단이 핵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코스피 5000’을 위해서도 금융당국은 ESG 공시 의무화를 과감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나무를 심어야 할 가장 좋은 시기는 20년 전이었다. 그 다음으로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금융위는 ‘바로 지금’ ESG 정보공개 법제화라는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그 열매는 우리나라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경쟁력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ESG 공시 법제화 등 정책과 제도 인프라 구축에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국회ESG포럼 공동대표인 민병덕 의원님, 정희용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으로 비록 참석은 못하셨지만 영상으로 축하의 말을 전해 주신 이억원 금융위원장님, ESG 공시 소관 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고 계신 강준현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더불어 국회ESG포럼 공동사무국을 맡고 있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유연철 사무총장님, 오늘 기조 강연을 맡아 주신 책임투자원칙(PRI)의 내이션 파비안 지속가능시스템 최고 책임자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소개해 주실 성신여대 이민정 교수님, 글로벌 ESG 동향과 대응을 발표할 김태한 이사, 좌장을 맡아 주신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양춘승 상임이사님과 모든 패널 분들, 마지막으로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5년 9월 30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 **김영호**

| 환영사

유 연 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안녕하십니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유연철입니다.

먼저, 오늘 『ESG 공시 제도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22대 국회ESG포럼 공동운영사무국을 맡아 환영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행사를 위해 각별한 노고를 기울여 주신 국회ESG포럼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의원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일정에도 영상으로 축하를 보내 주신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ESG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신 국회ESG포럼 의원님들과 협력위원님들,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의 관점을 담아 기조연설을 맡아 주신 내이선 파비안 PRI 지속가능시스템 최고책임자와 발표를 맡아 주신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님, 이민경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국회ESG포럼은 지난 10월 출범 이후, ESG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초당적 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그 일환으로, 국내외 ESG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앞으로 우리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후위기,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ESG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된 시대를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속가능성 공시지침(CSRD)과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을 제도화하며 국제 표준을 선도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무역과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ESG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은 우리 기업의 경영 환경과 수출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ESG 공시는 기업의 자율적 보고를 넘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뒷받침하는 필수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ESG 공시를 핵심적인 투자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국제 기준과 국내 현실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기업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는 2026년까지 ESG 공시기준과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재발의 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토론회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방향을 중심으로 ESG 공시의 법제화와 공시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우리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국회의원, ESG 업계 종사자, 기업 담당자, 그리고 ESG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마련하는 공시 제도와 법적 기반은 기업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고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공동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도 국회ESG포럼의 공동사무국으로서, ESG 가치 확산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함께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30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유연철**

| 축하

이 억 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입니다.

국회 ESG포럼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신
민병덕 의원님과 정희용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님,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님과
여러 관계자 및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기후변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지구온난화의 시기를 거쳐 지구가 끓어오르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국에 기상 관측망이 깔린 '73년 이후 가장 뜨거웠던 올해 여름을 생각하면,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구 온도 상승폭을 억제하기 위해
파리기후협정을 체결('15년)하는 등 공동대응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국에서 기업의 지배구조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도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주주 권익 보호와 중대재해 등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회 ESG 포럼은 ESG 관련 제반 이슈에 대해 토의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귀중한 논의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ESG 공시체제는 우리 경제의 신뢰도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ESG 공시기준과 로드맵 마련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함께

①주요국 동향, ②투자자 요구, ③우리 경제의 특수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 억 원

| 축사

강 준 현

정무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II 발 제



글로벌 투자자 관점에서 본 ESG 공시 법제화의 중요성



About the PRI

A global investor initiative supporting the six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About the PRI

2 UN Partners UNEP Finance Initiative UN Global Compact	5,000+ Global Signatories Asset Owners, Investment Managers, Service Providers	\$128tn Assets Under Management Total AUM of all PRI signatories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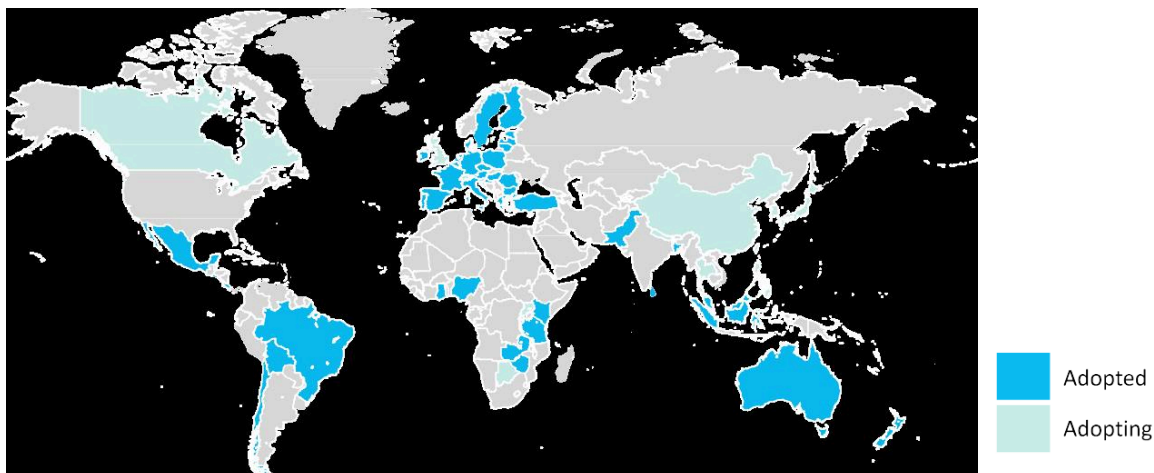
In early 2005, the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Kofi Annan invited a group of the world's largest institutional investors to join a process to develop the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ISSB adoption globally – from standards to regulation

Nearly 40 jurisdictions have adopted (or are currently adopting) the ISSB standards into law – over 60% of global GDP

- Nearly 40 jurisdictions have adopted (or are adopting) ISSB standards into law – over 60% of global GDP
- This does not include voluntary implementation - 1,000+ companies have already referenced ISSB in their reports
- Expected to increase – IOSCO's endorsement recommended all 130 members consider adopting the standards
- The need for continued global adoption: the PRI's [joint statement](#) with support from 120 investors calling for 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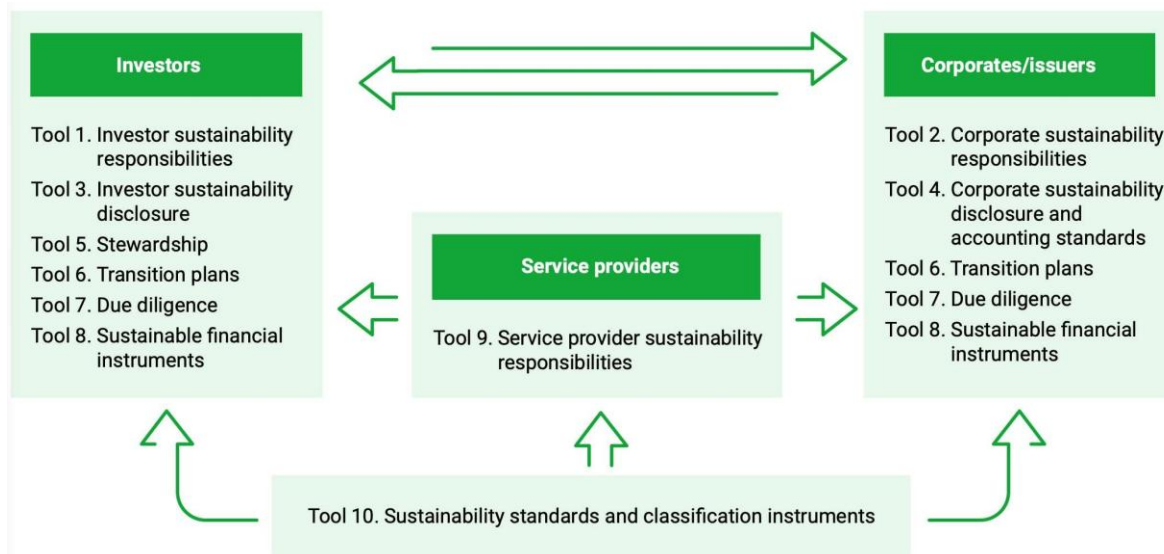
Beyond mandatory sustainability reporting

A comprehensive approach for integrating sustainability-related risks and opportunities

- Investors' role to play in supporting Korean issuers to deliver long-term growth through sustainability disclosure.
- Disclosure is not the full solution; **broader reform on stewardship and collaborative engagement** is needed.
- Key consideration when implementing
 - Transition planning guidance and support;
 - Investor climate-related financial reporting;
 - The government's vision and plan for climate transition.
- A comprehensive approach is required when integrating sustainability-related risks and opportunities into capital markets.
 - Sustainable finance policy roadmaps and strategies
 - The PRI's policy toolkit 2.0

Key features of the policy enabling environment for RI

The PRI's Policy Toolkit 2.0



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An investor initiative in partnership with UNEP Finance Initiative and UN Global Compact

Thank you

The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

The PRI works with its international network of signatories to put the six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into practice. Its goals are to understand the investment implications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issues and to support signatories in integrating these issues into investment and ownership decisions. The PRI acts in the long-term interests of its signatories, of the financial markets and economies in which they operate and ultimately of the environment and society as a whole.

The six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are a voluntary and aspirational set of investment principles that offer a menu of possible actions for incorporating ESG issues into investment practice. The Principles were developed by investors, for investors. In implementing them, signatories contribute to developing a more sustainable global financial system.

More information: www.unpri.org

This document is provided for information only. It should not be construed as advice, nor relied upon. PRI Association is not responsible for any decision or action taken based on this document or for any loss or damage arising from such decision or action. All information is provided "as-is" with no guarantee of completeness, accuracy or timeliness and without warranty of any kind, expressed or implied. PRI Association is not responsible for and does not endorse third-party content, websites or resources included or referenced herein. The inclusion of examples or case studies does not constitute an endorsement by PRI Association or PRI signatories. Except where stated otherwise, the opinions, recommendations and findings expressed are those of PRI Association alone and do not necessarily represent the views of the contributors or PRI signatories (individually or as a whole). It should not be inferred that any third party referenced endorses or agrees with the contents hereof. PRI Association is committed to compliance with all applicable laws and does not seek, require or endorse individual or collective decision-making or action that is not in compliance with those laws. Copyright © PRI Association (2024). All rights reserved. This content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for any other purpose,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PRI Association.



FOLLOW US



[X \(formerly Twitter\)](#)



[LinkedIn](#)



[YouTube](#)



[PRI podcasts](#)



[Webinars](#)

- RESPONSIBLE INVESTMEN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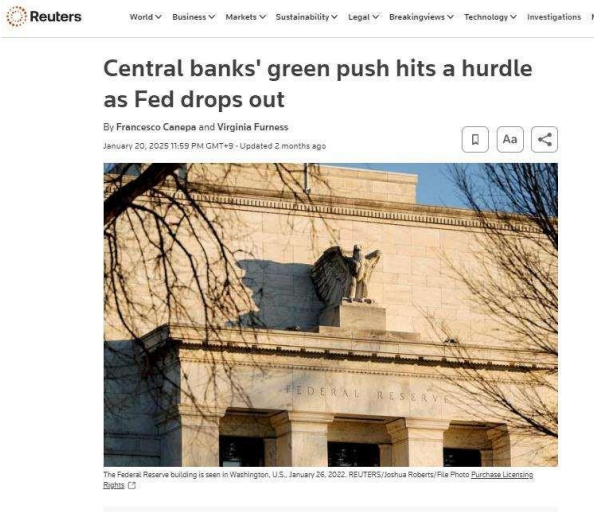
글로벌 ESG 동향과 대응

글로벌 ESG 동향과 대응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한 이사



트럼프의 재등장과 미국의 후퇴



Six big US banks quit net zero alliance before Trump inauguration

Exodus from target-setting group is attempt to head off 'anti-woke' attacks from rightwing politicians, say analysts

● Business live - latest updates



Canary Wharf in east London. JP Morgan is the latest to withdraw from the UN-sponsored NZBA, following Citigroup, Bank of America, Morgan Stanley, Wells Fargo and Goldman Sachs.

기후금융 선구자 캐나다 총리로

Mark Carney wins race to replace Trudeau as Canada's prime minister

By Promit Mukherjee and Ismail Shakil

March 10, 2025 8:33 AM GMT+9 - Updated 18 min ago



[1/5] Mark Carney, Ottawa, March 9, 2025. REUTERS/Carlos Osorio/Pool Purchase Licensing Rights



미국 24개주 기후 동맹 결성

- 캘리포니아, 뉴욕 등 미국 24개주는 연방정부의 정책과는 별개로 강력한 기후변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기후 동맹 결정
- 이들 주는 미국 GDP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규모는 총 11.7조 달러에 육박
-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들이 독자적인 전기차 보조금 및 기후공시 추진 중

UNITED STATES
CLIMATE
ALLIANCE

Mr. Simon Wolf, Executive Secretary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FPO Box 20024
B-1000 Bonn, Germany

January 20, 2025

Dear Executive Secretary Wolf,

We write as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Climate Alliance – a bipartisan coalition of 24 state governments representing nearly 60 percent of the U.S. economy and 50 percent of the U.S. population, to make it clear to you, and the rest of the world, that we will continue America's work to meet the goals of the Paris Agreement and make climate progress.

As you know, this is not the first time we've recognized this challenge in the U.S. Our coalition was launched after the President's decision to withdraw our country from the Paris Agreement back in 2017. Since then, our work, resolve, and impact have only grown.

In fact, our states and territories are now on track to meet our near-term climate target by reducing collective air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by 40 percent below 2005 levels by 2030. Our member programs reflect a range of ambitious state policies and federal funding around our best law cases – and it helps our coalition's 12-year record of saving consumers while simultaneously growing our economies. We have continued to ramp up our longer-term commitments as well, pledging to reduce GHG emissions at least 52 percent by 2050 and to cut our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by 100 percent by 2050. Additionally, our coalition has committed to developing clean energy, clean water, clean air, clean jobs, and clean communities. Our coalition has also pledged to support clean energy, clean water, clean air, clean jobs, and clean communities. Our coalition has also pledged to support clean energy, clean water, clean air, clean jobs, and clean communities.

Our states and territories continue to have broad authority under the U.S. Constitution to protect our people and advance the climate solutions we need. This drive us forward with state-led initiatives, including clean energy, clean water, clean air, clean jobs, and clean communities. Our coalition has also pledged to support clean energy, clean water, clean air, clean jobs, and clean communities. Our coalition has also pledged to support clean energy, clean water, clean air, clean jobs, and clean communities.

It is critical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know that climate action will continue in the U.S. The Alliance will bring this message to the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in Brazil (COP30) later this year – just as we have across G20 and other multilateral forums – and work to implement our climate goals. We are also committed to leading and reporting on our progress and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and the global community to develop and implement the Paris Agreement. We will continue to report on our progress and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and the global community to develop and implement the Paris Agreement. We will continue to report on our progress and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and the global community to develop and implement the Paris Agreement.

We will not rest until we have met our climate commitments. For our health and our future, we will press forward.

Sincerely,

Kathy Hochul
Governor Kathy Hochul, Gov. Chair
State of New York

Michelle Lujan Grisham
Governor Michelle Lujan Grisham, Gov. Chair
State of New Mexico

AK

ME

VT

NH

RI

MA

CT

NJ

PA

OH

WI

IA

SD

WY

UT

OR

WA

MT

ID

MN

ND

NE

MO

IL

IN

AR

KS

NM

AZ

CA

NV

CO

WV

VA

MD

DE

NC

TN

KY

LA

MS

AL

GA

SC

FL

TX

OK

HI

MP

GU

AS

PR

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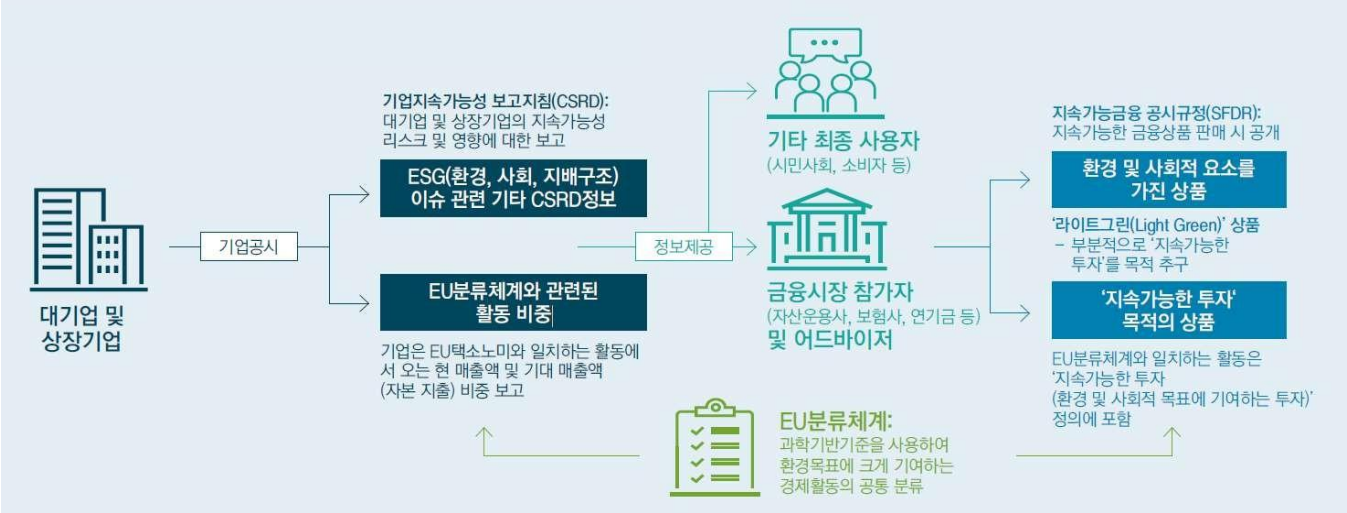
4

KOSIF Korea Sustainability Investing Forum

24

EU, 지속가능성 관련 제도 지속 추진

- EU는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SFDR), 기업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탄소국경조정제도(EU ETS) 등 지속가능성 제도 지속 추진 중



5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GX(Green Transformation)

- 일본은 2023년 GX(Green Transformation) 발표 후, 트럼프 재집권 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

항목	세부 내용
 정책 개요	• 목표: 2050년 탄소중립 달성 • 발표: 2023년 2월 • 핵심: 화석에너지 → 청정에너지 구조 전환 • 기간: 향후 10년 로드맵 (2023-2033)
4대 추진축	① 안정적 에너지 확보: 재생에너지 36~38%(2030), 원자력 최대 활용, 수소·암모니아 도입 ② 성장지원을 위한 탄소가격제: GX-ETS(2033년 정제), 탄소부과금(2028년 도입) ③ 대규모 투자: 150조 엔 민간투자, 20조 엔 GX 경제이행채 발행 ④ 국제협력: 아시아 제로 이미션 공동체(AZEC), 아시아 GX 컨소시엄(2024.10 출범)
 지원분야(14개)	공급측면: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암모니아, 카본리사이클 연료/CSS 수요측면: 에너지 효율화, 제조업 연료·원료 전환, 운송 탈탄소, 디지털 투자
 GX 리그	• 참여: 679개 기업 • 배출량: 일본 전체 온실가스의 40% 담당 • 역할: GX-ETS 시범 운영, 민간협력 플랫폼
재원 조달	1단계(현재): GX 경제이행채 20조 엔 발행 (세계 최초 주권 전환채권) 2단계(2028~): 탄소부과금 + 배출권거래 수익으로 채권 상환

6

KOSPI 5000과 일본의 아베노믹스

아베노믹스와 세 가지 화살

- ✓ 첫 번째 화살: 대담한 금융정책
- ✓ 두 번째 화살: 신속한 재정정책
- ✓ 세 번째 화살: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성장 전략

세계일보 [국회]
“반드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만들겠다”... 與, ‘코스피5000 특위’ 출범
입력 2025.08.23 오후 9:28 | 기사원문
김경표 기자

2 댓글

“약 3년6개월 만에 3000 돌파”
“대통령과 민주당의 경제 정책 기조는 분명”

더불어민주당의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가 23일 정식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표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의 출범식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최정호 선임기자

세 번째 화살의 ESG 정책

- 기업 지배구조 개혁
일본 기업들의 높은 수익성과 강력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 코드(Corporate Governance Code)와 스튜어던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도입
- ESG 투자 확대 유도
세계 2위 규모의 공적연금인 일본공적연금(GPIF)이 책임투자원칙(原則)에 가입하고, 투자 분담에 ESG 요소를 반영하도록 독려했다
연립내각의 각 부처에 ESG 스튜어던십 코드를 의무화하여 일본 자본시장 전체에 ESG 투자를 촉진
- 기업 가치 제고
- 아베노믹스는 ESG 요소를 개선하여 일본 기업의 체질을 바꾸고, 이를 통해 국내외의 장기 투자를 유치하여 일본 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겠다는 방침
- ESG 경영이 단순히 환경과 사회적 책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인식

영국 전기차 보조금 조건에 제조사의 넷제로 목표 포함

한국경제 [국회]
英 전기차 보조금 조건 'SBTi'...韓 기업 대응 전략 '시급'
입력 2025.08.08 오전 6:02 | 기사원문
주진 댓글

[한경ESG] 이슈

영국 전기차 보조금(Electric Car Grant) 제도 개요

항목	세부 내용
시행일	2025년 7월 16일
운영 기간	2028-2029년 회계연도까지
보조금 대상 차량	3만7000파운드 이하 배터리 전기차(BEV)
환경기준에 따른 보조금 구조	• 필수 기준 • SBTi 단기 목표 또는 넷제로 목표 승인 • 차등 기준 • 필수 기준 충족 제조사에 한해 차등 조립 위치 (30% 반영) 및 배터리 생산지(70% 반영)의 전력 온실가스배출계수(EA 자료 기반)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 • Band 1: 3750파운드 • Band 2: 1500파운드 • 부칙력: 0파운드

자료 영국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주요 자동차 기업 SBTi 승인 현황
자료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기업명	SBTi 승인 여부	본사 위치	전력배출계수*
현대/기아	미참여	한국	451 gCO ₂ /kWh
폭스바겐	단기목표 승인	독일(EU)	213 gCO ₂ /kWh (EU 평균)
테슬라	미참여	미국	384 gCO ₂ /kWh
르노	단기목표 승인	프랑스(EU)	213 gCO ₂ /kWh (EU 평균)
BMW	단기목표 승인	독일(EU)	213 gCO ₂ /kWh (EU 평균)
BYD	미참여	중국	560 gCO ₂ /kWh

중기이코노미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영국 전기차 보조금 조건에 제조사의 넷제로 목표 포함

- 현대차와 기아는 SBTi 승인 이전까지 영국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자체 소비자 보조금 (할인) 프로그램 **2025** 중 **2025** 이후에도 SBTi 이행을 위해서는 공급망 전반의 넷제로 달성 필요
- **SBTi** 승인 받는다 하더라도 한국의 높은 전력배출계수로 보조금 전액 수령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HYUNDAI

New CarsOffersOwnersElectric Cars

Hyundai Electric Grant.

Available on all electric models.

The Hyundai Electric Grant offers you £3,750 off the all-new INSTER and £1,500 off our other electric models, this includes KONA Electric, IONIQ 5, IONIQ 6, IONIQ 5 N, and our latest electric model, IONIQ 6*

All-new INSTER

Saving £3,750

Get a quote

All-new IONIQ 9

Saving £1,500

Get a quote

New IONIQ 5

Saving £1,500

Get a quote

KIA

Googleads

GMGEMC

NEW KIA ELECTRIC CAR ALLOWANCE

£3,750

ON THE EV4 AIR

T&CS APPLY

EV4 Offer

EV4 Offer

The New Kia EV4 Electric Car Allowance

£3,750 Electric Car Allowance

We are delighted to support the Kia Electric Car Allowance. An allowance of £3,750 is now available on the EV4 Air*

Representative Example based on a Kia EV4 Air £31,999 2024 170kWh Automatic MY24

Enquire Now

Test Drive

9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SBTi와 CDP를 연방조달 참여 조건으로 추진 시도



OFFICE OF THE FEDERAL CHIEF SUSTAINABILITY OFFICER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HOMEABOUTPLANPOLICYPROGRESSRESOURCES & GUIDANCE

Federal Supplier Climate Risks and Resilience Proposed R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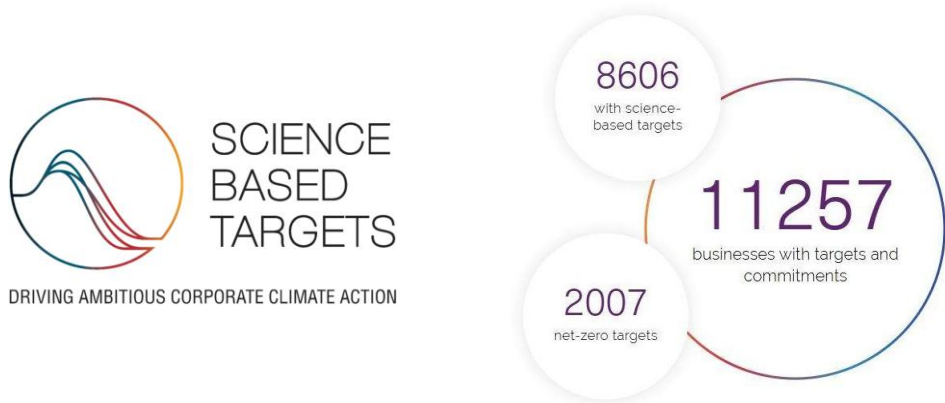
[Home](#) / [Federal Sustainability Plan](#) / [Net-Zero Emissions Procurement](#) / [Federal Supplier Climate Risks and Resilience Proposed Rule](#)

Federal Contractors		Federal Supplier Climate Risks and Resilience Proposed Rule Requirements		
Segment	Annual Federal Obligations	Scope 1, Scope 2, and relevant categories of Scope 3 emissions in alignment with the GHG Protocol Corporate Standard	Climate Risks assessed in alignment with the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Emissions reduction target validated by the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SBTi)
Major Contractors	>\$50M	Yes (through CDP)	Yes (through CDP)	Yes (through SBTi)
Significant Contractors	>\$7.5M-\$50M	Yes (Scope 1 and Scope 2 only)	No	No
Other Contractors	<\$7.5M	No	No	No

10

참고 과학기반목표 이니셔티브(SBTi)

- 기업의 넷제로목표 수준이 기후과학(IPCC)에서 요구하는 1.5도씨 목표 달성에 충분한지를 평가하고 승인해주는 역할 하는 전세계 유일의 비영리 기관으로, 사실상의 국제 표준 역할 수행



11

글로벌 기업 트럼프 이후에도 넷제로 목표 지속 추진

- 국내 기업의 주요 글로벌 고객사 가운데 트럼프 집권 후 기후정책 완화 기운 거의 없어
- 고객사 입장에서 보면 마케팅 및 제품 경쟁력 측면에서도 공급망 저탄소화 요구 지속하는 것이 유리
- 기후변화에 대한 진정성과 무관하게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를 지속하는 것이 납품 가격 협상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공급망 정착 완화 동기 없어

Apple has set an ambitious goal to be carbon neutral across its global supply chain by 2030

200+ suppliers
committed to using clean energy like wind or solar for their Apple prod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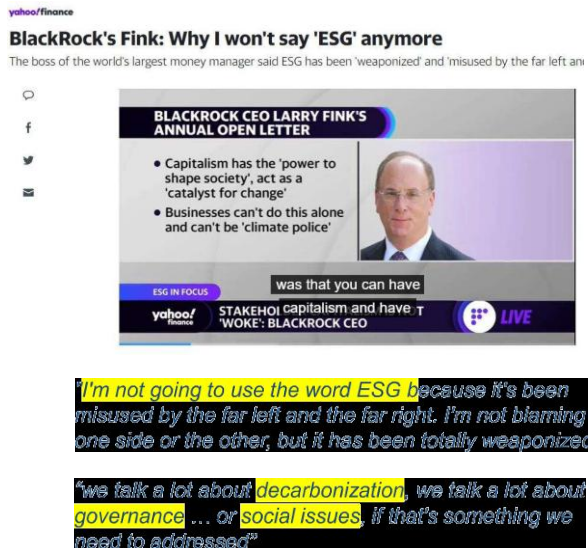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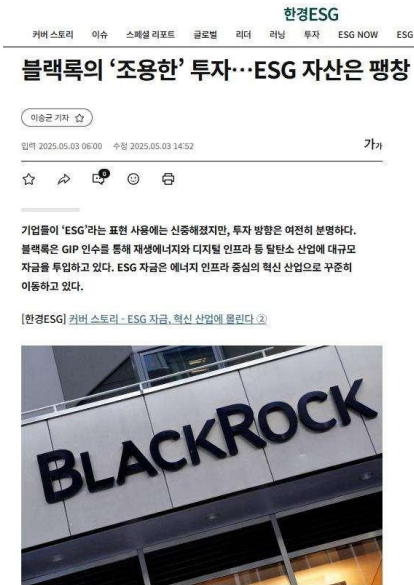
3,000 GWh
of new renewable energy across Europe per year by 2030 to address the electricity used by Apple devices on the continent

1 million metric tons
of carbon forecast to be removed in 2025 through Apple's Restore Fund

기업	넷제로 목표 달성 시점	공급망(Scope 3) 포함 여부
애플	2030년	포함
구글	2030년	포함
MS	2030년	포함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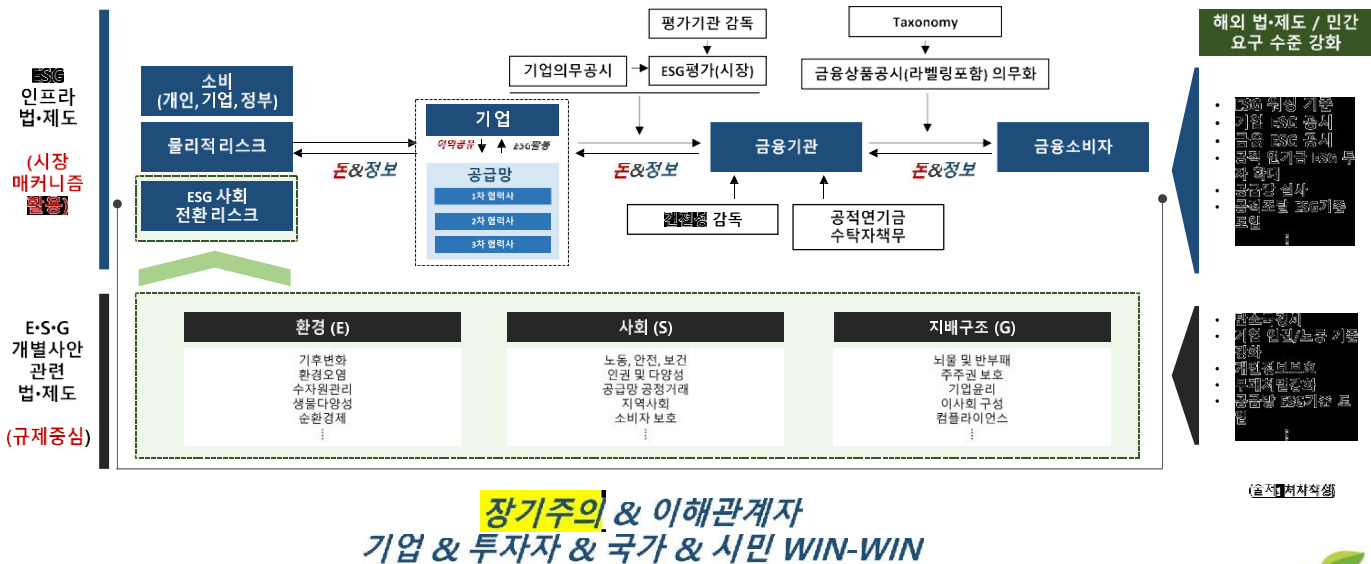
ESG 용어 사용하지 않겠다는 블랙락도 ESG 자산은 팽창 중



13

트럼프 시대에도 ESG를 계속 하는 이유

- ESG는 장기 리스크 관리 전략이자, 모든 이해관계자가 Win-Win할 수 있는 전략



ESG와 시계(time horizon)의 비극 그리고 제도화의 필요성



마크 카니 (Mark Carney)

-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학사/ 옥스퍼드대학교 경제학 박사
- 골드만삭스
- 캐나다 재무부 수석부 장관
-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2008-2013)
- 영국 중앙은행 총재 (2013-2020)
- G20 금융안정위원회(FSB)의장 / TCFD 도입
- 유엔 기후변화특사
- 글래스고 넷제로 금융연합(GFANZ)

기후 민스키 모멘트(climate minsky moment)

- 2019년 마크카니 전 **중앙은행장** “Breaking the Tragedy of the Horizon – climate change and financial stability” 연설에서 처음 언급
- 민스키 모멘트: 긴 호황 끝에 자산 가치가 갑작스럽게 급락하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의미
- 기후 민스키 모멘트: 기후리스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급격하게 전환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시스템 위기를 의미
- 투자자들이 비록 현재는 기후리스크를 인식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미래의 어느 시점에 저탄소 전환을 인식하게 되면, 기후리스크에 노출된 자산 가치에 대한 광범위하고 전면적인 재평가가 일어날 수 있음
- 이러한 재평가에 따른 자산 가치 손실이 일정한 임계점 을 넘게 되면,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붕괴되는 기후 민스키 모멘트가 발생할 수 **있을**

제언 1. ESG 기본법 도입

- 사실상 사회경제 시스템 전 영역을 다루는 ESG의 특성으로 **인해** 여러 상임위원회 및 정부 부처가 ESG 가운데 특정 영역에 대한 **법** 제도를 산발적으로 발의 및 발표
- ESG를 사회전체 편익 증가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ESG생태계’ 관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 지정 및 체계적 정책 방향성과 전략 수립이 시급
- ESG는 장기적 과제로 법적 안정성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기반 필요

				
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기업위원회
60	28	17	12	10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7	4	1	1	1

출처: 지속가능성 정책 수립 로드맵(미래에셋증권 및 기업경영연구소), 국회입법조사처

「제언 주요 내용(2)」 ○ 통제: 목적, 중대성의 원칙 및 각 주제 별 책무(부서, 기업, 소비자, 정부, 시사계, 공공기관 등) ○ ESG 평가: 비점 및 수점 정책 수립과 점화계산(진용/그린워싱 방지) ○ ESG 원순환 경제 선택지 구축 ESG 정보 생산-유통-관리 체계 구축 (정보공시, ESG 분류체계, ESG 평가 감독) ESG 금융과 투자자보호 (공적금융 포함) ESG 경영 및 공급망 관리 (공공조달 포함) ESG 소비 (ESG 소비촉진 및 라벨링) ○ ESG 원순환 사회 선택지 구축 ESG 사회적 신뢰 제고 (그린워싱 방지, 정부-기업-시민 사회적 논의 기구) ESG 교육 및 인재양성 (ESG 학과 및 교육 커리큘럼 개발, 산학연계 강화, 중소기업 교육 체계 마련) - ESG 중심 좋은 일자리 창출 (ESG 우수기업 = 좋은 일자리, 중소기업 ESG 정보 활용 일자리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 ESG 중심 대·중소 동반성장체계) 지자체 별 ESG 전략 수립 및 지원체계 구축 (실단 별 ESG 지원, 지역 별 수출 중심 산업 지원)
--

제언 2. 국민연금의 중점관리사안 실효성 강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13조(중점관리사안)

중점관리사안은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정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별표 4와 같이 정한다.

1.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2.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3. 법령상의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
4.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
5. <삭제>
6. 기후변화 관련 위험 관리가 필요한 사안 <신설 2023.3.7.>
7. 산업안전 관련 위험 관리가 필요한 사안 <신설 202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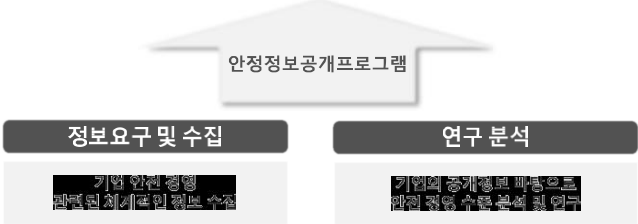
그 밖에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17

제언 3. 자발적 기업 안전정보공개 프로그램 도입

- 기업의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규제 강화와 더불어 시장을 통한 인센티브·패널티가 필요
- 지금까지의 안전 정보는 사고발생 결과에 대한 정보 중심 정부·기업 간의 정보 유통 중심
- 안전이슈도 결과(사고발생여부)뿐만 아니라 과정(안전예방 및 대비 시스템)도 함께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ESG 평가 등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ESG 평가 등 투자자들에게 투자결정에 사용될 수 있는 기업의 안전 정보 제공
국민, 언론에 기업의 안전 경영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기업 신뢰도 향상 기여
기업 간의 벤치마킹 정보 제공하여 기업 안전 수준 향상 기여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안전경영 및 정책	1. 안전 리더십
	2. 안전경영 및 목표
	3. 안전경영 시스템
안전 위험 관리	4. 잠재 위험의 분석 및 평가
	5. 환경 안전
	6. 안전 사고에 대한 대비 및 대응
커뮤니케이션	7. (아차)사고의 보고, 조사 및 사후처리
성과	8. 커뮤니케이션 및 대외 협력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 책임	9. 안전 관련 사고 발생 때
	10.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 책임
보고데이터의 신뢰성	11. 보고 데이터의 신뢰성

18

•————•
감사합니다
•————•

ESG 공시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제 22대 국회ESG포럼 주최

ESG 공시 제도화 방안 토론회 : 자본시장법 개정안 방향

2025년 9월 30일(화)

ESG 공시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이 민 경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법적 인프라의 필요성

지속가능성 공시 및 법적 근거의 필요성

기후 변화, 에너지 전환,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이슈 등
환경·사회적 변화가 기업 경영 및 자본시장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시·인증 법제화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주요 국가에서 추진되어 왔으며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에 대한 법제화가 명확한 추세임
- 글로벌 투자자는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여부와 신뢰성을 핵심 투자 요소로 고려하고 있으며,
국내 자본시장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 인프라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 최근에는 환경(E)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등 사회적 요소(S)의 공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지속가능성 공시 법제화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ESG 정보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 제고함으로써 주식시장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 선결 과제임

3

지속가능성 정보 인프라 구축

공시→인증→평가로 이어지는 지속가능성 정보 인프라 구축 필요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해서도 재무 정보와 대등한 수준으로 양과 질을 확보할 필요

	공시	인증	평가
의미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도록 함	정보의 정확성을 제3자가 검증	정보의 분석을 통해 활용도를 높임
재무 정보	정기공시, 수시공시 -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자본시장법)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감사 - 외부감사보고서 (외감법)	증권사의 주가 전망,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자본시장법 등)
지속가능성 정보	ESG 정보 공시 의무화	ESG 정보에 대한 제3자 인증 의무화	ESG 평가회사의 ESG 평가, ESG 등급

주요국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법제화 동향

유럽연합(EU)

EU는 이미 FY2017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비재무정보 공시를 의무화(NFRD)

- ❑ NFRD를 강화한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도입하여, **FY2024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사업보고서 내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에 따른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함**
- ❑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은 **국제 기준과 상호운용성을 고려하여** 제정
- ❑ 2025년 2월 옴니버스 계획으로 일부 기업의 공시 일정이 연기되었으나, 비EU기업의 공시 일정에는 변동이 없음
- ❑ 일정 규모 이상의 **비EU기업은 FY2028부터**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시의무가 적용됨
- ❑ 이로 인해 **국내 수출대기업은 EU 시장에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반면, 국내 제도 미비로 **국내에서는 동일 정보가 공시되지 않는 공백 발생 가능**

호주는 2024년 9월 회사법 개정으로 연차보고사항에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

- ❑ 기존 공시체계와 통합하여 회사법상 재무정보 공시 의무가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하여 **FY2025부터 단계적 확대**
- ❑ 2024년 9월 국제기준(IFRSS1·S2) 기반 호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AASB S1·S2) 채택
- ❑ 2025년 1월 국제기준(ISSA 5000)에 대응하는 자체 인증기준(ASSA 5000) 채택
- ❑ **최초 1년·3년 간 지속가능성보고서·감사보고서상 보호대상진술에 대해 민사책임을 명시적으로 제한** (회사법 Section 1707D)

보호대상진술 유형	제한적 면책 기간
미래 기후 관련 진술	2025. 1. 1. ~ 12. 31. 시작되는 회계연도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시나리오 분석·전환 계획	2025. 1. 1. ~ 2027. 12. 31. 시작되는 회계연도

7

일본은 FY2023부터 유가증권보고서를 통한 지속가능성 공시의무 부과(내각부령 개정)

내각부령-금융상품거래법(金融商品取引法)상 유가증권보고서 등의 기재사항을 정하는 규정

- ❑ 日 금융청은 지속가능성 공시 전문그룹(WG)을 별도로 구성하여, **기존 공시의무 강화**를 위한 개정 논의 진행 중
- ❑ 일본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SSBJ)는 2025년 3월 **ISSB 기준을 전면도입한 일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SSBJ 기준)**을 발표함
- ❑ 日 금융청은 공시 WG 내에 인증 WG을 별도로 설치하여 **인증기준, 인증인의 등록제도, 자격, 업무제한, 의무, 검사·감독 등 구체적 사항**을 논의 중

일본 지속가능성공시(SSBJ기준 적용) 및 인증 로드맵							
공시기준 도입		인증기준 도입					
FYB	2026	2027	2028	2029	2030	...	203X
시총 3조엔 이상		공시의무화	인증의무화		공시 + 인증의무화		
시총 1조엔 이상			공시의무화	인증의무화		공시 + 인증의무화	
시총 500억엔 이상	자율선택			공시의무화	인증의무화	공시 + 인증의무화	
프라이미 시장						...	공시의무화 검토

주요국은 기존 의무공시체계와 통합하여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의무를 부과

- 지속가능성 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 효용성을 높이는 한편, 제재수단 등 이미 마련되어 있는 법률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개별 국가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면서도 국제기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국제적 정합성과 비교가능성도 확보하고 있음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한 면제, 단계적 적용, 면책 제도를 마련

- 재무정보 수준 규제의 현실적 한계와 부담 고려

한편, 제3자 인증제도의 설계와 법제화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 중

제도화의 방향성 및 고려사항

1.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및 공시기준 제정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

- ☐ 허위 공시에 대한 규율 등 **자본시장법의 기존 제도 활용** 가능
- ☐ **공시의 주된 수단인 사업보고서**에 재무정보와 더불어 지속가능성 정보를 함께 제공

제도기반 마련을 통한 법적 안정성 확보

-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관련 업무 수탁기관 지정 근거**, **조직·예산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함
- ☐ 법적 근거가 부재 시 공시 위반 여부 판단 과정에서 법적 불안정성 발생

11

2. 제3자 인증 및 세부사항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인증 의무화

- ☐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된 제3자의 검토·인증**이 필요

인증제도의 설계 요소

- ☐ **인증기관 등록 요건, 인증전문가 자격 요건, 인증기준 제정 근거, 인증기관·인증전문가의 의무, 인증보고서의 작성·제출,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위임함
- ☐ 인증 전문가의 육성과 자격 관리 필요

3.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면책 근거 마련 및 단계적 시행

면책근거 마련

- 제도의 도입 초기 단계에 관련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업의 단순 실수 등으로 인한 부실 공시에 대해 책임 면제 필요
- **고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기간 민사·행정 책임은 면제, 형사 처벌은 배제**하는 방안

공시 및 인증대상법인의 단계적 확대

-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및 인증에는 비용이 소요되고, 정보에 대한 수요에도 차이가 있음
- 따라서 **모든 기업에 대해 처음부터 전면적인 공시나 인증을 요구할 필요는 없음**
- **기업규모를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은 기업(예를 들어 대기업, 수출 기업, 외국 사업이 많은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13

기업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자본시장법상 공시위반 제재 감경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 및 성실공시법인 지정제 도입

증권발행분담금 감감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발행분담금의 50% 감경

기업여신 우대 또는 제한

- 「은행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지속가능성 공시 성실법인에 대한 자산건전성 등급 상향 조정
-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하여는 신용공여 제한(공시기준에 산업 안전 리스크를 포함하여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대출 제한과 연계 가능)

감사합니다

이 민 경

minkyunglee@sungshin.ac.kr
02-920-9440





토론문



토 론 문 1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국회 ESG 공시제도화 방안 세미나』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수립에 대한 산업계 의견

2025.9.30.(화)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조영준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EU, 지속가능성 규제 완화 위한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

- EU, 과거 ESG 규제 강화 및 **기업 부담 고려**하여 최근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
 - EU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25.2) → EU 의회 본회의 통과('25.4)
 - ESG 공시 의무 대상 축소, 친환경 정책 완화 등 변화 조짐

ESG 규제 반대 여론 확산

연암뉴스

EU, 트랙터 시위에 환경규제 완화...러 곡물 수입 제한도 검토

송고시간 | 2024-03-16 03:33

| '휴경 의무' 사실상 폐지 추진...6월 선거 앞두고 '정책 우항우'



ESG 규제 완화

‘탄소중립’ 속도 조절하는 유럽



유럽연합(EU)

2025년 7월 시행 예정이던 강화된
배기가스 규제 기준 ‘유로 7’
현 수준 유지 검토

스웨덴

2024년 예산안에 기후변화 관련
예산 약 315억 원 삭감.
유류세 감면도 포함

영국

경유·휘발유 신차 판매 금지 시기
2030년→2035년으로 5년 미룸

EU 옴니버스 패키지 제안의 배경: dragged 보고서

- EU 집행위원회가 공개한 「EU 경쟁력의 미래」 는 EU 옴니버스 패키지 관련 논의 가속화
 - EU 집행위, Mario Draghi 前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에게 보고서 의뢰(23.9) → 작성·발표(24.9)

‘유럽의 경쟁력 강화 전략’ 및 ‘주요 섹터별 현황 진단·제안’ 주요 내용

- EU의 저성장 및 미국과의 GDP 격차 확대는 노동생산성 저하에 기인, 생산성 증가가 미래 성장의 원천임을 강조
 - EU의 노동생산성은 1945년 미국의 22% 수준에서 1995년 95%까지 상승, 그 이후 미국보다 더 큰 폭으로 둔화되어 2010년대에는 미국의 80% 수준으로 하락
 - 노동인구 감소와 짧은 근로시간, 디지털 경쟁력 확보 지연 등이 노동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임을 주장
- * 임금근로자 연평균 근로시간(OECD, '22): 한국 1,904 미국 1,822 이탈리아 1,563 영국 1,516 프랑스 1,427 독일 1,295
- 산업구조 혁신, 성공적 탈탄소화 전략, 안보 강화, 대대적 투자자금 조성 등 EU의 산업 경쟁력 확보 위한 정책 혁신 必
 - EU의 에너지 대외 의존도 및 고에너지 비용 해소와 EU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둔 일관성 있는 공동 탈탄소화 계획 수립
 - EU가 경제적 경쟁력을 염두에 두고 탈탄소화라는 필요한 목표를 추가할 것을 권고

2

글로벌 공급망 內 협력사 환경·인권 향안 소비자 인식도 강화

- 글로벌 기업들 중심으로 공급망 관리에 대한 요구 증대
 - 중소협력사의 경우 글로벌 대기업 요구 미충족 시 거래 중단 또는 소비자의 인식 변화로 불매 운동 영향 받을 수 있어

글로벌 기업의 ESG 기반 공급망 관리 사례				ESG 경영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애플  · ‘협력사 청정에너지 프로그램’ 발표 [2030년까지 협력사는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제품을 공급] · 공급망 내 모든 단계의 협력사에 대한 노동권, 인권, 건강, 환경보호 등 행동수칙 [Apple Supplier Code of Conduct] 마련 및 평가	테슬라  · 테슬라는 배터리 공급망 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콩고에서 생산되는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는 ‘코발트 프리(Cobalt Free)’ 배터리 개발 계획 발표	BMW  · 2020년부터 주요 공급업체의 지속가능성 정보와 평가 결과를 공개 · 공급업체의 지속가능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50회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마이크로소프트  · 2030년까지 연간 탄소순배출 마이너스를 목표로 하는 ‘2030 Carbon Negative’ 선언 · 2050년까지 회사 설립(1975) 이후 총 배출량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서 제거 목표	✓ 제품 구매 시 ‘기업의 ESG 활동 고려한다’ 63.0% ✓ ‘ESG 활동에 부정적인 기업의 제품을 의도적으로 구매하지 않은 경험 있다’ 70.3% ✓ ‘ESG 우수 기업 제품의 경우 추가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할 의향이 있다.’ 88.3% ✓ ‘ESG 우수 기업 제품의 경우 추가 가격 지불 의향’ 10% 이상(6.3%), 7.5~10%(8.0%), 5~7.5%(13.3%) 자료: 대한상공회의소(21.5)

중소기업의 대응

▪ 국내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 측면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창출하기 시작함

국내 중소·중견기업 ESG 평가 빅데이터 분석 (대한상의, '24.4)

국내 中企 ESG 성적, E(환경) 주도로 대폭 개선돼

- 商議, 최근 중소·중견 2,131개사 평가결과 22년 '취약' → 24년 '양호'로 개선효과 뚜렷
- ESG 리스크 높은 '취약' 등급 줄고(13.3%p↓), '양호'(7.3%p↑)·'우수'(6.0%p↑)는 늘어
- 분야 '대기오염물질'(+5.3%), '온실가스'(+3.4%) 등 크게 개선... 분야 '근로환경', 분야 '정보공시' 등도 개선
- 정부·지자체 노력도 한 몫, ESG 데이터 플랫폼 등 수출기업 경쟁력 제고에 민·관 손 잡아야

<표1> '22-'24년도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수준 비교표 (10점 만점 / 최단값 기준)

	'22년	'23년	'24년
	2.0 ~ 2.2	3.2 ~ 3.4	4.6 ~ 4.8

영역	항목	'22년	'23년	'24년	증감 ('24년-'22년)
사회 (S)	정보보호	4.50	2.91	3.12	-1.38
	인권	5.10	5.50	6.43	1.33
	보건안전	3.65	5.18	5.57	1.92
	근로환경	1.96	5.01	5.7	3.74
	분쟁광물	2.59	1.32	3.07	0.48
지배구조 (G)	사회공헌	1.56	2.43	3.35	1.79
	정보 공시	1.67	2.83	3.38	1.71
	관리시스템	1.14	1.48	2.4	1.26
	감사	2.43	2.57	4.14	1.71
	윤리경영	3.65	3.60	3.93	0.28

※ 자료: SK Click ESG 플랫폼

<그림2>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수준 등급별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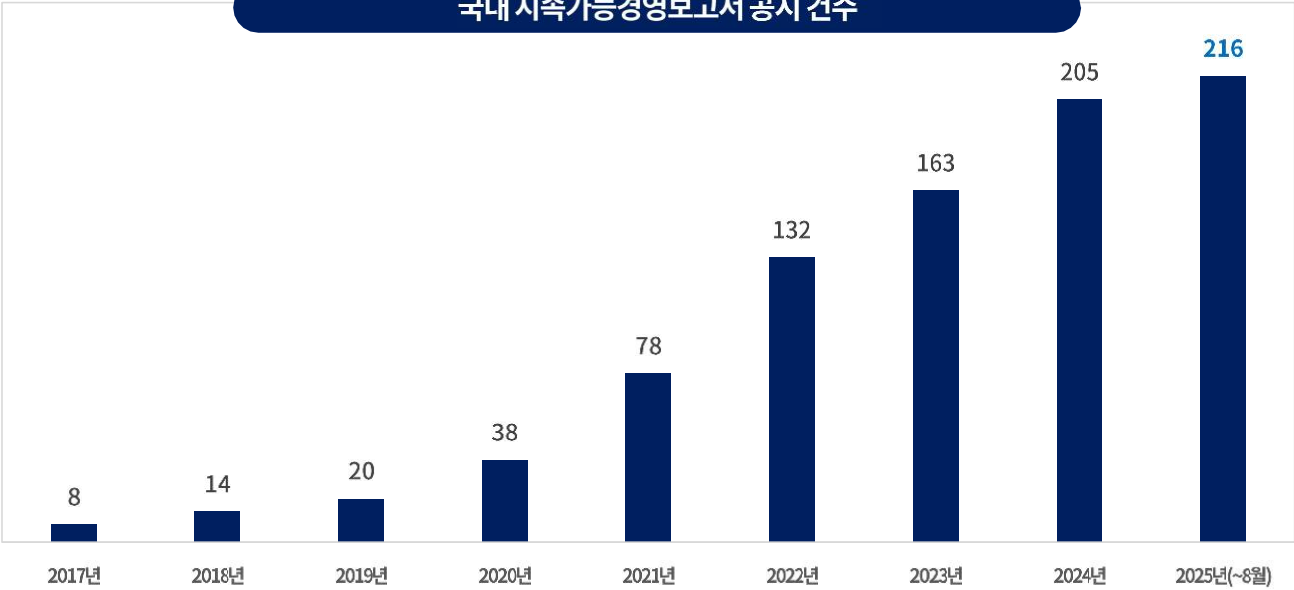


※ 자료: Click ESG 플랫폼

공시 의무화 앞둔 국내 기업,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선택 아닌 '필수'

-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
- '17년대비 '24년 보고서공시 건수 2563% ↑, ESG 본격화두 된 '20년대 초반부터 공시건수 대폭 증가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건수



자료:한국거래소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한 기업 애로사항

▪ 기업들은 ESG 공시 의무화 부담 커... “구체적 공시 기준과 충분한 유예·면책기간 필요”

- 공시기준 모호하고 연결기준 공시, 기후변화시나리오, 예상 재무영향 분석 등 기업부담 가중
- EU, 미국, 일본 등 제도 도입 경과 살펴보고 해외 기업 사례 등 검토해 신중히 추진할 필요

ESG 공시 의무화 관련 기업 주요 애로사항

ISSB 및 KSSB 기준 모호해
공시 준비에 부담...
구체적 기준과
가이드라인 제시되어야

한국은 대기업 집단 많은 탓에
연결기준 공시에 특히 어려움...
충분한 준비기간 주어져야

소송 등 기업 리스크
완화할 수 있도록
적용 유예기간 충분히 갖고
면책조항 등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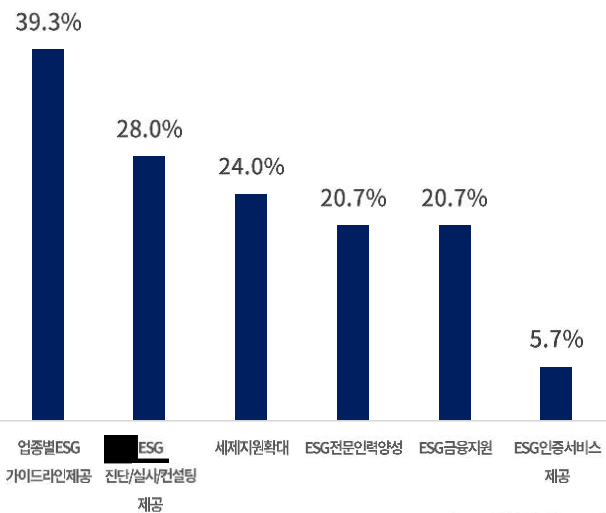
기후시나리오 분석,
예상 재무영향 분석 등은
대기업에서도 준비 어려워...
해외 사례 참고할 시간 달라

자료: 대한상의 기업 간담회('24.2)

국내 기업의 ESG 공시 역량 제고 위한 정책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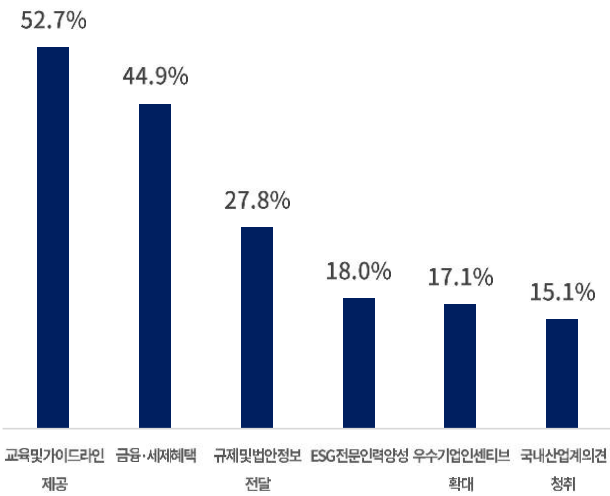
- 규제 아닌 기업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정부와 국회의 정책/제도적 지원 필요
- 국내 기업, 비용·인력 등의 부족으로 ESG 경영 수준 아직 높지 않아 맞춤형 지원 必
 - ESG 관련 기업 애로: ‘비용 부담’(58.3%), ‘내부 전문인력 부족’(53.0%) 등 (대한상의, '23.3)
 - ESG 경영 추진 위한 세제·금융지원과 함께 업종별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 제공, 전문인력 양성 필요

ESG 경영 확산 위한 주요 정책 과제



자료: 대한상의('23.3)

공시 등 ESG 관련 수출 규제 대응 위한 정책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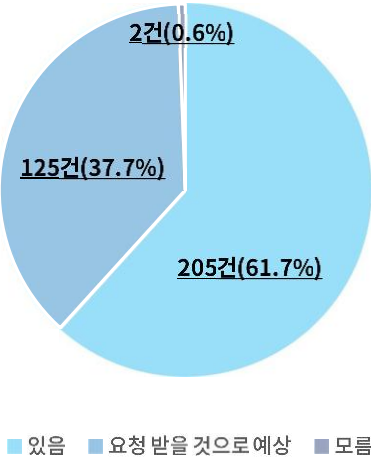
자료: 대한상의('24.3)

산업 공급망 ESG 데이터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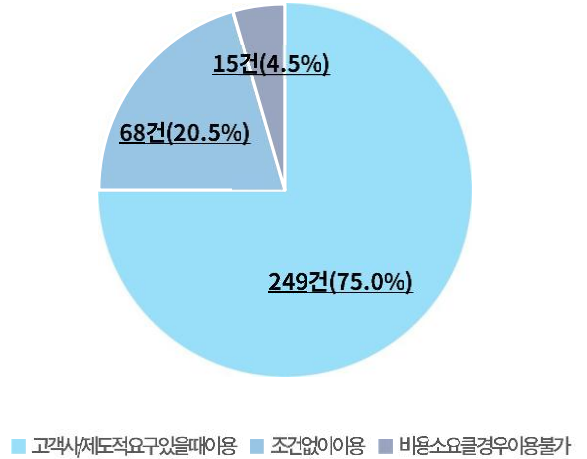
- **ESG 규제 본격화되면서 수출기업들 공시/실사대응 필요성 확대**
- 원청사 ‘중복투자’, 협력사 ‘중복 실사’ 부담 해소 위한 국가 차원 **ESG Data Platform** 필요
 - 다수 원청사, 동일한 ESG 실사 요청 → 원청사별 상이한 진단결과로 협력사 피로감 누적
 - ESAP처럼 국내에 산재한 협력사 ESG 정보를 하나로 통합한 ‘공공 DB’ 구축해야

* ESAP(European Single Access Point) : EU 회원국 내 ESG 및 재무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단일 플랫폼

Q. 고객/협력사로부터 ESG 관련 데이터, 평가, 인증 요청 받은 경험



Q. 산업 공급망 ESG 데이터 플랫폼(가칭)에 대한 이용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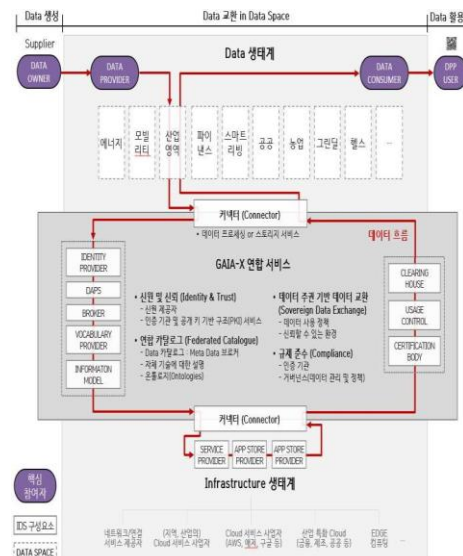


자료: 대한상의 (’25.4)

DPP(Data Product Passport)

- EU, 제품의 **전 생애주기** 정보를 관리하는 **디지털 제품 여권(DPP)** 제도 도입
- 한국의 경우, EU 규제 대응 플랫폼 부재 및 개별 기업 대응 한계

EU Gaia-X 기반 아키텍처 및 데이터 흐름



한국형 데이터 스페이스 시사점

	Catena-X	Ouranos Ecosystem	한국형 데이터스페이스 시사점
모델	• 분산형 Data Space로 글로벌 데이터 네트워크 연계 및 서비스 사업자 참여	• 정보와 연계, 원거 간 한계를 바탕으로 민간 연계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데이터의 활용을 조성	• Catena-X와 Ouranos의 혼합형 - 분산형 Data Space, 정부 주도 민간 협력
목적	• 자동차 업종 가치사슬 내 데이터 공동 표준 생성	• 복합적인 산업 구조 변화 및 해외 규제 대응	• 해외 규제 대응 및 데이터 시장 활성화
사상	• 자동차 산업을 위한 공급망 데이터 교환 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 가치 극대화 및 사업화	• (기업, 업계, 국경 간) 데이터 연계 기반 제공, 생태계 조성 및 참여자의 데이터 주권 보호	• (초기) 정부 주도 생태계를 구축 • (중장기) 지속성을 고려한 민간형 전환
데이터 주권	• SSI기반의 신원 인증 및 접근 제어 체계 채택 • 기업의 실제 데이터는 사용자/제공자간 계약을 통해 사전 정의된 규칙과 조건에서만 공유	• 규제 대응 및 산업 보호 위한 정보 가이드라인 제공 • 참여 기업은 협회 내 합의된 틀 따라 데이터 주권 행사	• 글로벌 표준 기술 구조 및 체계 적용 - SSI기반의 신원인증 및 접근 제어 등 - 사전 정의된 규칙과 조건에서만 데이터 공유
구현 방식	• GAIA-X 및 IDSA 기반 데이터 표준 모델 구축 - 글로벌 기업/네트워크의 원활한 데이터 교환 지원	• 협회 중심 플랫폼 통해 기업/산업/국가 간 데이터 교환 - 규제 대응 위한 공급망 내부의 데이터 통합 촉진 • ODS-RAM(표준모델) 분산형 P2P 교환 로드맵 - 글로벌 Data Space 연계 위해 상호연결 등 잔존과제 해결	• '표준모델 구축' 통한 해외 데이터 교환 필요 - 분산형 P2P 교환 및 Data Space 연계 필수 • 기업 정보 보호와 대응 방안 마련 필수
주요 참여자 및 역할	표준/인증 기관 • Catena-X Automotive Network e.V : 제안된 Catena-X 표준에 대한 검토 후, 승인된 표준 공식 게시 • CAB : 서비스 및 사업자 등에 대한 표준 준수 심사 인증 Colinix-X • 데이터 스페이스 서비스 운영 : App 사업자 및 데이터 사용자/제공자 대상 라이선스 비용 청구 • 서비스 & 앱 탐색/활용을 지원하는 Marketplace 운영 : 예, PACIFIC (제품 단위 매출률 관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사업자 • BAP, OSP, AP 사업자 등 다양한 형태의 민간 사업자 참여 중 *사업자/서비스는 Catena-X 표준 준수	정부 • 데이터 활성화 추진 (Architecture, 설계, 범용,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기술 표준, 기능 사양, OSS 배포 등) 산업 협회 • 각 산업 협회 중심 데이터 교환 기반 운영 (e.g. ABIC) • 공급망 데이터 연계 조율 (e.g. CFP 추적성 관리 중심 등) • App 또는 사업자의 참여 인증 등 생태계 활성화 일반 기업 • 협회 주도 공식 플랫폼 참여 및 공급망 내 데이터 교환 • 기업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주권 보호 사업자 구분 - App 개발 : CFP 계산 애플리케이션 - 업무 지원 : App 산장 (LCA 기반 검증 역할) - App 개발 지원 : SDK 테스트 환경 제공	• 데이터 교환을 위한 생태계 조성 : Architecture, 기술 표준, OSS 배포 등 • 생태계 활성화와 위한 컨트롤 타워 : 인증 검증 프로세스, 고급 정책, 운영 정책(개발정보 보호 등), 지원금 조성 등 • 각 산업 별 DPP 규제 모니터링 • 한국형 표준 모델 및 기술 기반의 산업 회 자체 플랫폼 구축 등 대응 • 산업 회 플랫폼 통한 데이터 공유 • 데이터 주권 기반 기업 정보 보호 • 필요 App 과 서비스의 활용 • 마켓 플레이스는 민간 자율 영역, App 과 서비스의 개발 및 경쟁 • 기관의 인증 심사 및 체계 운영

감사합니다



토 론 문 2 |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과장

토 론 문 3

| 이윽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국회 ESG 포럼] KSSB 상임위원 발언 요지_기준 관련

(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 '25.9.26일)

1. 기준제정 경과 및 공개초안에 대한 관심

□ ISSB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국제 정합성과 기업 수용가능성을 균형있게 고려한 공시기준을 제정 중**

- **(공개초안 발표) '24.4월**, 공시기준서 제1호(일반 요구사항), 제2호(기후 관련 공시사항), 제101호(정책목적에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4개월간**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 **(의견 조회 활동)** 산업별 간담회, 포럼 등 폭넓게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공시기준의 **실효성을 제고**

* · 자산 2조 이상 상장사(242개사) 대상 산업별 간담회 21회(208개사 참여)
· 10대 그룹사, 금융사, 경제단체 등 핵심 이해관계자 현장 간담회 참여(3회)
· 공개 포럼, 토론회, 외부 세미나 참여(30회 이상)
· 지속가능성자문위원회, 투자자 전문위원회, 법령정보위원회와 수시 논의

- 특히, 공개초안에 대해 **256건의 서면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이 중 **기업 응답이 111건**으로 가장 많았음
- 또한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와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해외 주요 투자자들도 의견을 제출**하는 등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음

2. 잠정 결정 사항

□ 공시기준서는 기업에 영향을 주는 위험 및 기회를 핵심요소(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에 따라 기업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 요구사항별 KSSB의 잠정 결론은 다음과 같음

- **(보고기업)**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업. 즉,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종속기업 포함한 **연결실체**로의 정보를 공시. 단, 중요하지 않은 종속기업은 제외 가능

- **(스코프 3 배출량)** 정보유용성, 국제 동향을 고려해 공시를 요구하
되, 기업수용가능성을 고려해 **일정 기간** 공시를 **유예**
- **(선택 공시사항)** 일부 요구사항*에는 국제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기업의 현실적 수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를 기업이 선택
할 수 있도록 함
- * 산업기반지표 공시, 구체적으로 기업이 설정한 **톤 당 내부탄소가격, 기후 외**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 공시

3. Sweep issues

-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KSSB의 논의는 마무리 된 상태로, 현재는
변화하는 국내외 동향*을 고려해 다음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
- * ISSB는 IFRS S2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소규모 개정을 진행 중
- **(스코프 3 배출량 카테고리 15 범위 명확화)** 카테고리 15를 금융
배출량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명확히 함
- **(GICS외 다른 산업분류체계 사용 가능)** 금융배출량에 대한 추가
정보 공시 시, GICS 이외의 산업분류체계를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관할권 예외 허용)**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관할권에서 요구하
는 측정 방법 및 GWP 값을, 기업이 요구받는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4. 향후 계획 및 이행지원 활동

- **(공시기준 관련)** 정부, 유관기관 등과 논의 후 최종 **공시기준을**
발표할 예정
- **(이행지원 활동 관련)** 공시기준이 자본시장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행지원 활동을 추진

- **(교육자료 개발)** 공시기준의 실무 적용 지원을 위해 현재 약 17종*의 교육자료가 개발되었으며, 공시기준 발표 시점에 개발이 완료된 교육자료는 공시기준과 함께 발표할 예정

* 불임, '현재 개발중인 교육자료 목록' 참고

- **(이행지원그룹 구성 및 운영)** 공시기준 적용 시의 실무 문제를 분석 및 논의하고, 논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 **(산업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산업별 이슈 식별 및 관련 논의를 통해 실무 관행 형성을 지원
- **(질의회신 플랫폼 구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시기준에 대한 질의 응답을 수행하고, 관련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함

구분	교육자료명
기준원 개발	1.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주요 FAQ
	2. 보고기업
	3.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거버넌스
	4. 적용사례
연구결과물 기반	5.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 1·2) 산정 시 고려할 사항'
	6. 기후 관련 물리적 위험의 식별
	7. 내부 탄소 가격
	8.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ISSB 교육자료 기반	9. 지침의 원천으로서 SASB 기준 활용
	10. 자연, 사회적 측면과 관련된 기후 공시
	11.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GRI 기준간의 상호운용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중심으로
	12. 현재 및 예상 재무적 영향
	13.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에서의 비례성 메커니즘
	14. 기후 관련 정보만 공시할 때, 공시기준서 제1호의 적용
	15.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자발적 적용
	16.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공시의 연계
	17.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식별과 중요한 정보에 대한 판단

토 론 문 4 |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25
YEARS

ESG 공시 제도화 추진 방향 : 자본시장법 개정안 방향

이은경 실장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Copyright 2025. UN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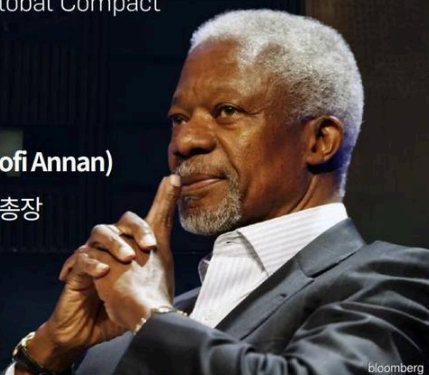
유엔글로벌콤팩트 (UNGC, UN Global Compact)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코피 아난 (Kofi Annan)

前 유엔 사무총장



- 1999년 1월 31일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WEF)에서 Kofi Annan 前 유엔 사무총장, Global Compact 제창
- 2000년 7월 뉴욕 UN본부에서 Global Compact 발족
(전 세계 비즈니스 리더들, 기업, UN기구, 노동, 시민단체 참석)
- 배경
 - 환경, 사회 이슈에 있어 기업의 영향력 확대
 -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기업 역할의 중요성 강화
 - 유엔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추진 기구 발족 필요성

Uniting Business for
a Better World

25
YEARS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UNGC 10 Principles + SDGs

국제적 합의에 기초한 4대 부문 10대 원칙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추구

인권 HUMAN RIGHTS	세계인권선언 (1948)
노동 LABOUR	근로자 기본권선언 (1989,ILO)
환경 ENVIRONMENT	리우선언 (1992)
반부패 ANTI-CORRUPTION	유엔반부패협약 (2003)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의 발전(Leave No One Behind)”

Who Cares Wins(배려하는 자가 승리한다), 2004 변화하는 세계와 금융시장의 연결

- 금융기관의 ESG를 고려한 투자 장려
→ 강력한 회복탄력적 시장 조성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

* 권고안 25개 (Recommendation A to Y)

- A: ESG 통합은 투자자 · 자산운용사 등의 이익 창출
- Y: 고위경영진과 이사회는 ESG 리더십 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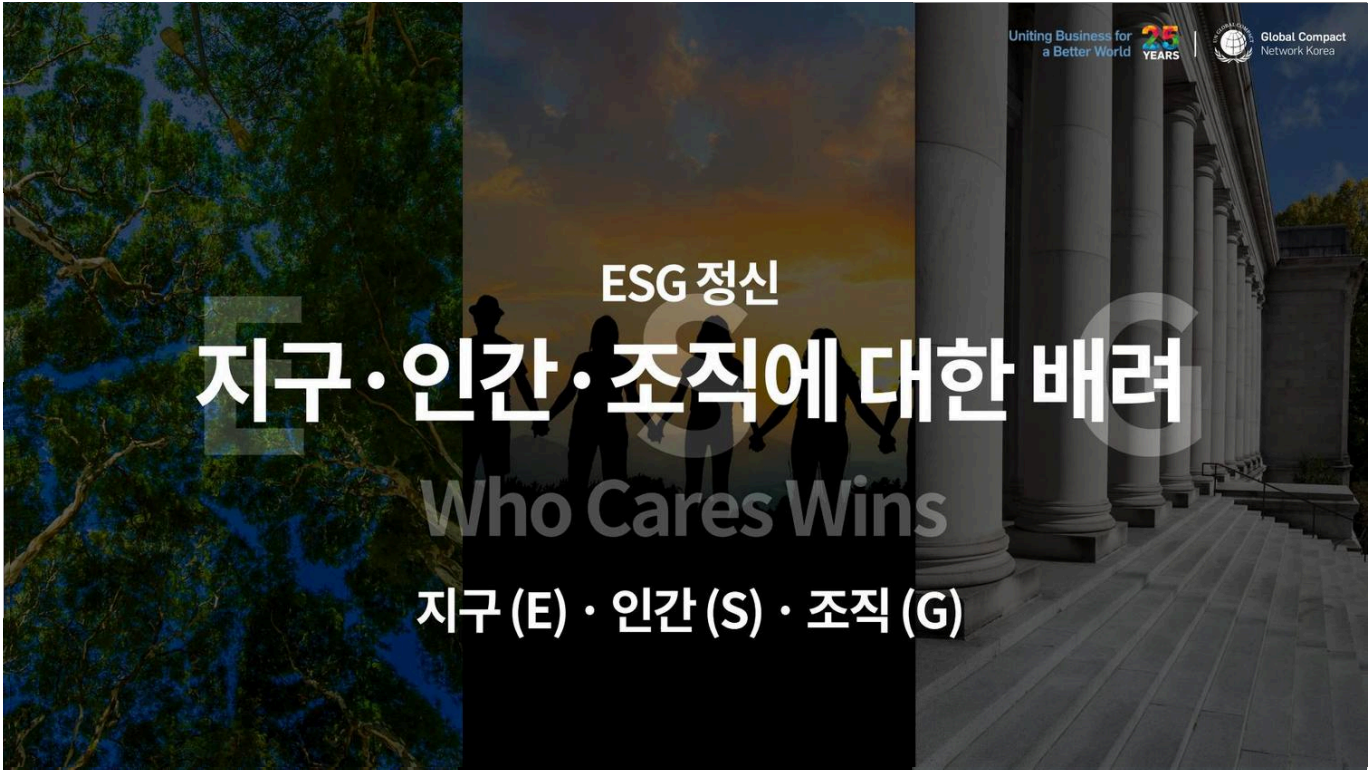


Who Cares Wins

Connecting Financial Markets
to a Changing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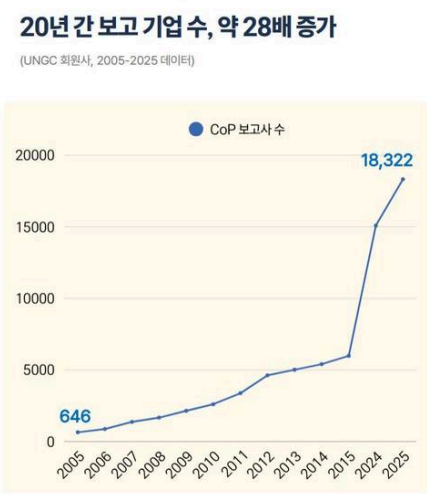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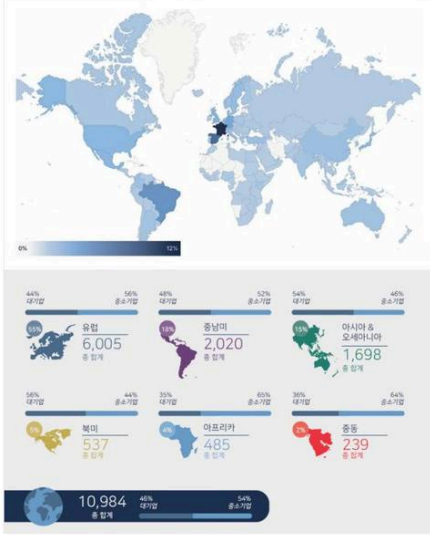
Recommendations by the financial industry to better integrate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ssues in analysis, asset management and securities brokerage

Initiated by:
ABN-Amro Bank • AXA Group • BNP Paribas • Citigroup • Credit Suisse • HSBC • JPMorgan Chase & Co. • Morgan Stanley • Royal Bank of Canada • Standard Chartered • UBS • Wells Fargo
Co-led by:
BlackRock • Fidelity Investments • Vanguard Group • State Street Global Advisors • T. Rowe Price • U.S. Bancorp
Co-led by:
CIBC • Citigroup • Credit Suisse • HSBC • JPMorgan Chase & Co. • Morgan Stanley • Royal Bank of Canada • Standard Chartered • UBS • Wells Fargo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이행보고서(Communication on Progress, CoP)

이행보고(CoP) 분석 보고서 CoP 데이터 대시보드(CoP Data Visualization Tool) 이행보고(CoP) 증가율



출처: UNGC CoP Data Visualization Tool (2024) 출처: UNGC 2024 CoP 이행보고서 인사이트 리포트

우선순위 높은 ESG 이슈

▲공시, ▲기후공시/기후리스크, ▲공급망 실사



-
- 공급망, 탄소, 기후, 재생에너지, 공시, ESG, ESG 시스템, ESG 데이터, ESG 가이드, ESG 평가, ESG 리스크, ESG 전략, ESG 경영, ESG 투자, ESG 정보, ESG 커뮤니케이션, ESG 리더십, ESG 성과, ESG 목표, ESG 지표, ESG 측정, ESG 평가 방법, ESG 평가 기준, ESG 평가 기관, ESG 평가 결과, ESG 평가 보고서, ESG 평가 투명성, ESG 평가 신뢰성, ESG 평가 정확성, ESG 평가 객관성, ESG 평가 공정성, ESG 평가 독립성, ESG 평가 전문성, ESG 평가 경험, ESG 평가 인력, ESG 평가 예산, ESG 평가 시간, ESG 평가 리소스, ESG 평가 위험, ESG 평가 기회, ESG 평가 도전, ESG 평가 과제, ESG 평가 해결책, ESG 평가 혁신, ESG 평가 변화, ESG 평가 미래, ESG 평가 가능성, ESG 평가 잠재력, ESG 평가 영향력, ESG 평가 책임, ESG 평가 의무, ESG 평가 권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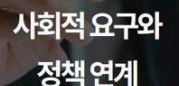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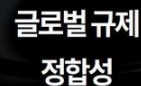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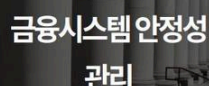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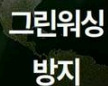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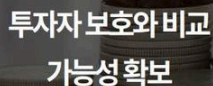
출처: UNGC 한국협회 ESG 팀장 네트워크 서베이 (2025)

Uniting Business for
a Better World

25
YEARS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단순한 투자자 정보 제공을 넘어 금융안정·정책 목표 달성과 국제 정합성 담보

ISSB, 재무중요성 기반의 단일 중대성 채택

- ISSB: 단일중대성 채택
 - 재무중대성 기반의 단일중대성 채택
- 국내 KSSB 초안: ISSB 기준 정합성에 집중 → 단일중대성 중심
 - KSSB 기후(S2) 공시 의무화 검토
 - 기후 외 지속가능성 공시 기업 선택
- EU CSRD: 이중중대성(Double Materiality) 채택
 - → 사회·환경 영향 + 재무 리스크 모두 공시

단일 중대성 공시의 리스크

- 글로벌 투자자(블랙록, GPFG, CalPERS 등)와 PRI(책임투자원칙) 서명기관은 이중중대성 정보 요구
- 시민사회, 고객,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도 환경·인권·지역사회 영향 공시 요구
- EU 공급망 규제(CSRD·CSDDD) 대응에 한계
- 기업 신뢰·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정보 부족 우려
- 단일중대성만으로는 형식적 준수·국제 경쟁력 저하 초래
- 최소 준수 효과 → 기업이 '체크리스트식' 공시에 그칠 위험
- 투자자 보호 미흡 → 장기적 재무 리스크 사후 반영
- 사회적 영향 외면 → 인권·지배구조 리스크 누락

ESG 공시 의무화 추진 방향

이중중대성 검토
국제 기준 부합
장기적 리스크 관리

단계적 확대 가능
최소선은 단일 중대성
→ 중장기적으로
이중중대성 전환 필요

실질적 ESG 추진 유도
이사회·경영진 책임
인센티브 연계 병행

이중중대성 기반 접근
투자자 포함
주요 이해관계자
신뢰 확보

리더십 인식 전환
단기 규제 준수보다
장기적 전략
자산으로서
ESG 인식 필요

ESG 공시 의무화 추진 방향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이중 중대성과 인센티브·거버넌스 연계로 기업의 책임경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촉진

ESG공시 의무화 도입 시 고려사항	점진적 도입 방안
법적 책임 및 인센티브 검토 낮은 기준 설정 - 기업 부담을 고려해 공시 항목을 너무 좁게 잡으면, → 기업은 “법에서 요구한 만큼만” 하게 되며, → 결과적으로 자율적 선도기업이 추진하던 높은 수준의 ESG 활동이 위축될 수 있음 법적 책임 및 면책 - 법적 공시의무가 있어도, 허위·부실 공시에 제재가 약하거나 집행이 느슨하면, → “실질적 ESG 경영”이 아닌 “형식적 공시” 취중 → 성실 공시와 인센티브 연계 방안 적극 검토 비용 중심 사고 - 기업 입장에서 ESG를 “규제 준수비용”으로만 인식 - 혁신·경쟁력 강화가 아닌 리스크 회피 수단에 머무를 수 있음	국제적으로 제시되는 보완 장치: 이중중대성 - 재무적 리스크뿐 아니라 기업에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보고하도록 규정 (EU CSRD) - 투자자 정보 제공에서 사회적 책임 이행 유도 규제+인센티브 혼합 - 법정 공시와 함께 세제 혜택·녹색금융 접근성 확대 등 금전적 보상 제공 “비용이 아니라 기회” 인식 제고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시민사회·투자자 압력 유지 - 법정 공시에 더하여, NGO·투자자·언론의 감시(watchdog) 역할 필요 - 단순 준수를 넘어 “리더십 경쟁” 촉진 및 기업의 보다 나은 성과 추구 환경 조성 거버넌스 연계 - 공시 자체의 한계 → 이사회 책임(KPI, 보상제도)과 연결

국내 기업 공시 현황

2025 국내 주요 기업들의 ESG 공시 현황 (한국표준협회) (507개 기업 지속가능보고서 분석)

국내외 정보공시 표준 및 가이드라인 적용 비율



- 약 93%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기준 활용
- CDP, TCFD, SASB 등 다중 기준 병행보고 경험 보유

이중중대성 평가 및 기업 현황 분석

90% 이상 기업이 이중중대성평가를 실시

코스피 상장사는 KSSB/ISSB 공시 전환 예 큰 어려움 없음

GRI는 E·S·G 전 영역을 포괄 → S/ G 공시 확대 대응 가능

다만, 중소·비상장 기업은 자원·역량 부족 → 지원 체계 확대 필요
(가이드라인·교육·데이터플랫폼 등)

ESG 공시 의무화 향후 과제

1. 기후공시를 넘어 ESG 공시의무화로 단계적 확대 필요(산업별, 규모별 접근 전략)

- 사회(S): 인권·노동권, 인적자원관리 등
- 거버넌스(G): 이사회 구성, ESG KPI 연계, 반부패 리스크 등
- 기후 외 공시(E)-생물다양성, 수자원 관리 등

2. 정의로운 전환(AI전환), 공급망 실사 등 산업 대전환 및 규제 대응 고려한 공시 제도 설계

3. 이해관계자 참여 강화: 투자자 외 시민사회·고객·지역사회 등의 기대와 의견 수렴 및 소통

4. 국제정합성 유지하면서도 한국형 ESG 특수성(거버넌스, 노동시장 등) 반영

5. 데이터 인프라(AI활용) 강화 및 검증, 인증 역량 강화

6. 중소·중견기업 ESG 자원 및 역량 강화 지원 확대

Uniting Business for
a Better World

25
YEARS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감사합니다



UN Global Compact | unglobalcompact.org



UNGC Network Korea | unglobalcompact.kr

토 론 문 5 | 김원웅 국민연금 ESG 전략 팀장

토 론 문 6 | 최용환 NH-Amundi 자산운용 리서치 팀장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NH-Amundi자산운용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KOSPI 5000 시대를 위한 밸류 드라이버, ESG 공시 법제화

NH-Amundi자산운용 ESG리서치팀장 최용환

□ 들어가며

2023년 10월, 필자는 도쿄에서 개최된 PRI in Person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기시다 정부는 세계 최대 책임투자 컨퍼런스인 PRI 행사를 중심으로 3주간 Japan & Tokyo Sustainable Finance Week를 개최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GX 정책에 따른 일본 산업의 녹색전환과 전환금융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근 몇 년간 일본 금융회사들의 성공 요인 중 하나는 전환금융에 있다고 분석될 정도로 해당 정책은 순항하고 있습니다.¹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보면,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통한 국제시장과 적극적인 소통은 국내시장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를 포함하여 10월 중순까지 PRI의 데이비드 앳킨(David Atkin) CEO 및 내이션 파비안(Nathan Fabian) 지속가능시스템 최고책임자(CSSO)의 방한 일정은 한국 자본시장에 큰 기회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올해 6월말에는 약 90조달러(약12.5경원) 규모의 투자자들이 이끄는 글로벌 최대 거버넌스 네트워크인 ICGN(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의 쥘 시손(Jen Sisson) 대표가 방한했으며, 해당 기관은 내년 4월 14일에 서울에서 국제 컨퍼런스를 4년만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12일에는 ACGA(Asia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의 서울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는 등 최근 지속가능성/ESG와 관련된 글로벌 이니셔티브 기관들의 한국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의 배경에는 지난 6월 출범한 한국의 新정부가 상법개정, 세제개편, 중대재해, 기후위기 등 ESG 관련 제도 개편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新정부는 KOSPI 5000 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며,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9월 10일 KOSPI는 역사상 최고점이었던 3,316선(기준일 2021.06.25)을 돌파하였으며, 9월 15일 이후 3,400선을 돌파하여 현재 3,500선에 근접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투자자 관점에서 ESG 공시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와 함께 KOSPI 5000 달성의 밸류 드라이버로서 ESG 공시 법제화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투자자 관점에서 ESG 공시 법제화 필요성

첫째, 지속가능성 정보는 더이상 비재무적 정보가 아니며, 포트폴리오의 위험조정수익률(Risk-Adjusted Return)을 높이기 위한 주요 정보로서 활용되고 있으므로, ESG 공시 법제화를 통한 정보의 질적 향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리스크(Risk) 관리 관점에서 현재 ESG 투자 전략은 사전적으로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중대재해,

¹ 헤럴드경제, 해외기업·전환금융...일본 은행의 화려한 부활 3대 비결, 2025.06.18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NH-Amundi자산운용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정보보안 이슈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관리하고, 사후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투자대상종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컨트롤러시 이슈 발생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기반은 기업의 공시정보, 데이터 공급기관 정보, 뉴스 플로우 등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파악하며, 필요시 스튜어디십 활동(의결권 행사, 주주관여활동)을 통해 기업의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특히,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Top-Down 측면에서 기후 리스크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역사는 2006년 영국의 스텐 보고서(The Stern Review)에서 출발하여 약 20년이 되었으며, 올해 3월, 한국은행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의 예상 손실규모가 45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분석 결과를 아직 국가나 기업의 신용등급이 조정될 만큼 반영이 안되고 있으나, 향후 ESG 공시 법제화를 통해 정보의 질적 향상이 있다면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 기회(Opportunity, Alpha) 관점에서 1) ESG 평가기반, 2) ESG 테마, 3) 밸류에이션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ESG 평가기반 전략은 말그대로 ESG 등급/점수가 개선되는 종목에서 기회를 찾는 전략입니다. 다음으로 ESG 테마 전략은 대외적인 정책 및 산업 변화나, 대내적인 경영의사결정을 통해 성과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상법개정 이슈로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 투자하는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전략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중대성(Materiality)이 높은 이슈를 추출하고, 해당 이슈에 대한 기업의 매출액/CAPEX/OPEX 변화를 예상하며, 이를 미래현금흐름과 할인율에 반영하여 DCF(Discounted Cash Flow), CROCI(Cash Return On Capital Invested) 등 모델에 적용하여 ESG요인을 반영한 기업가치를 재산정 하여 투자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탄소노미에 적합한 녹색 매출액 비중을 높이기 위해 관련 CAPEX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면 전환기업으로 선정하여 투자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 이렇듯, 현재 포트폴리오의 위험조정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ESG 분석 방법론 및 투자전략은 상당부분 체계적이고 고도화되었으므로, ESG 공시 법제화를 통한 정보의 질적 향상이 있다면, 많은 발전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둘째,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가 정책적 일관성(Political Consistency)을 갖춘 신뢰성 높은 정보로서 안정적으로 꾸준히 공시되어야, 공시정보가 기업가치로 연결되는 경로성(Pathway)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 현재 기업의 IR부서에서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은 재무 공시를 할 때에는 회사가 발표하는 공시 수준이 기업가치 및 주가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가늠할 수 있어서 돈을 조절할 수 있지만,
- 지속가능성 공시는 ESG 분석 방법론과 펀드의 투자전략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하여, 공시정보가 기업가치로 연결되는 경로성(Pathway)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 공시를 보수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 만약 ESG 공시 법제화가 시작되고 3~5년 정도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기업이 공시한 수준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반응 정도를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사료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자본시장법 기반의 안정적인 의무 공시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특히 기대하는 점은 산업별 중대성(Materiality)이 높은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해 보다 명확한 컨센서스가 시장에 형성될 것이고, 이는 기업이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하여 기업가치를 향상하고, 자본비용을 감소하는 인센티브로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NH-Amundi자산운용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셋째, ESG 공시 법제화는 코스피 5000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많은 전문가들은 코스피 5000의 밸류 드라이버는 △산업체질 개선을 통한 이익성장, △소액주주권리보호(상법개정), △주주환원 강화(자사주 소각, 배당성향 상승), △세제개편, △공시 및 투명성 강화에 있다고 말합니다.
- 예를 들어,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GF)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시나리오로 △2025년 예상 주당순이익(EPS) 기준으로 5년간 연 4% 이익 성장, △상장사 보유 자사주 중 발행주식수 대비 2.5% 소각, △상장사 매년 발행주식의 1% 매입 후 즉시 소각 시에는 주가치 제고, 상향된 성장성, 배당 근거 30년 주가수비율(PER) 12.3배를 가정해 코스피 지수가 5030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렇듯 기존 전문가들의 논의는 다소 상장기업의 지배구조(G) 개선에 집중되어 있고, 앞서 살펴본 기후위기, 중대재해, 정보보호 등 리스크 요인, 테크노미 기반의 녹색전환과 같은 기회 요인 등 환경(E) 및 사회(S) 측면의 메가 트렌드 분석은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ESG 공시 법제화를 진행하면,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이 높은 데이터들이 축적되면서 자연스럽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코스피 5000 달성에 있어서 지속가능성 관련한 종합적인 기회 및 위험 요인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고, 해당 이슈가 잘 관리되어 원하는 목표에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토양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예를 들어, 2025년 9월 29일, 한국은행에서 한국형 기후 벤치마크 지수(K-PAB·CTB) 도입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SG 공시 법제화가 완료되면 좀 더 정밀한 기후 벤치마크 지수 도입이 가능할 것이고, 해당 지수를 활용하여 투자할 경우 수익성과 기후위기 대응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²

□ 시사점 및 제언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난 20년간 ESG 분석 및 투자 방법론은 매우 고도화되었으며, 앞으로 법제도 개편과 AI 기술 발전에 따라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의 新정부 출범과 함께 PRI를 포함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관심이 집중된 현시점에서 ESG 공시 법제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정보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기업들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이 온전한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애런윤(Aaron S. Yoon) 교수는 “지금까지의 회계 및 재무 정보는 기업의 가치를 온전히 분석하기에 충분치 않으므로,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가 필요하며,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한국만의 서사와 맥락(Narrative)을 중심에 둔 접근이 필요하다,” 라고 코멘트한 바 있습니다.³

이번 ESG 공시 법제화의 기틀을 잘 만들게 된다면, 이후에는 한국만의 내러티브를 중심에 둔 접근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측면에서도 한국 산업의 매력이 돋보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다음 과제가 될 것입니다.

² 한국은행, 주식시장을 통한 녹색전환 촉진방안: 한국형 기후 벤치마크지수 도입 타당성 검토, 2025.09.29

³ 임팩트온(IMPACT ON), 애런윤 교수, “글로벌기업과 한국기업의 ESG 접근방식, 차이점은?”, 2025.05.28